1. **농협의 디지털 서비스**

**NH디지빅털혁신캠퍼스**

NH농협은행의 특화형 디지털 전용 특구로 지난 4월 오픈했다

**NH빅스퀘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비정형·대용량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고객의 소리나 음성의 문자 전환시스템 등을 실현.

**올원뱅킹**

NH스마트뱅킹, NH금융상품마켓, NH퇴직연금, NH스마트알림앱 등을 원업(One Up)앱으로 통합. 은행 외에 카드, 증권, 보험 등 NH농협금융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올원뱅크(All One Bank)앱은 더욱 고도화 지난해 방문자 수는 9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5%나 증가, 이 중 41%가 2030세대여서 젊은 고객층 유입도 상당

‘**NH LiNK’ 서비스: 비대면 창구 활성화**.

모든 금융 거래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비대면화로 변화 목표. 가상지점 ‘NH LiNK’ 서비스를 출시했다. NH LiNK는 앱 기반 NH스마트뱅킹 금융상품몰을 웹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다. 휴대폰 인증 같은 간단한 비대면 실명 확인 작업만으로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입출금 통장 개설이나 계좌 조회, 환전 업무도 지원한다

1. **Open API**

과거에는 자산의 규모가 은행의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다양한 기업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은행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농협은행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계좌를 확보하고 있지만. NH 스마트뱅킹에 가입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는 각 유통플랫폼의 결제솔루션을 결제를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외부 플랫폼을 계좌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가 핵심이다.

은행에서 API라는 표준화된 규격을 내놓으면 시장은 스스로 규격에 맞춰 연결해 나간다. PI 형태로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이종 업종의 기업과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오픈API에 대한 규격화된 가이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금융보안원과 협업해 보안가이드를 만들고, 정부의 비조치의견을 수없이 받아 지금의 모델을 완성했다.

2년간의 엄청난 시행착오는 농협의 자산, API 사업은 디지털부서만의 영역이 아닌 보안, 컴플라이언드 등 은행 내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계속 보안을 해나가야 하는 사업

오픈API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오픈API에 연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의 환경이 조성돼야 진정한 오픈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픈 뱅킹의 개념**

오픈뱅킹은 고객의 사전 동의 하 고객 금융 데이터를 은행 외 제 3자가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통치하는 개념.

**국내 오픈 뱅킹 정책 동향**

2016년 세계 최초로 은행권, 증권사 공동 오픈 플랫폼을 구축.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구축 운영 중이며, 2019년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로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 플랫폼 확대와 공동결제망 개방, 오픈 뱅킹 법제화, 핀테크 기업의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한국형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이 중앙에서 공동 플랫폼을 운영. 협상력이 약한 소형 핀테크 사업자까지 공동 플랫폼에만 참여하면 개별 은행과의 협상은 따로 필요 없다는 게 한국형 오픈뱅킹의 가장 큰 특징

**글로벌 금융권의 오픈뱅킹 대응**

시티,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주요 은행은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ap)전환을 위해 API 개발자용 포털 개발, 신기술과 관련된 API 활용 등 오픈뱅킹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함.

글로벌 주요 핀테크 기업은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의 오픈 API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사의 API를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하여 한 차원 높은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국내 금융권의 오픈뱅킹 대응**

주요 은행은 모두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 신한, 하나는 개별적인 오픈 API 플랫폼을 운영중.

**향후 예상 되는 변화**

오픈뱅킹 시행은 고객과 핀테크 기업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축을 이동시킬 것이며, 금융업의 분업화와 재결합을 촉진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은행권은 BaaP로서 고객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픈뱅킹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과 이에 적합한 오픈 API 전략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함.

**오픈 뱅킹 우려1: 고객정보보호와 정보보안**

API 공개로 금융기관과 고객이 정보를 이용하던 구조에서 제 3자가 추가되어 데이터를 사용가능해진다. 금융정보는 민감한 정보, 변조 어플리케이션, 악성코드 등 유출 문제 있음. 또한 핀테크 기업은 보안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악, 오픈뱅킹 시스템 유지 및 운용자는 보안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오픈 뱅킹 우려2: 혁신 vs 정체**

기존 금융 앱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큰 변화가 없이 끝날 수도 있다. 오픈뱅킹의 성공은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산업이 구현될 수 있는 신용정보법 통과에 달려있다

**기대효과:**

정부 차원: 개별 은행의 폐쇄적 정보를 외부에 열어주면 여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나올 거란기대가 반영된 제도 설계.

핀테크 업체: 수수료도 건당 400~500원에서 20~50원으로 낮춰 수익성 증가.

은행: 고객 기반과 자본력을 갖춘 시중은행이 앱 편리성 등을 높여 초기부터 타사 고객을 빼앗아 오는 데 성공할 가능성

**사례1 ) 국내 은행권 및 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대비 서비스**  
신한은행은 앱 ‘쏠(SOL)’에서 타행계좌로 이체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타행계좌 5개까지 동시에 자금을 가져오는 집금 서비스, 대출이자납입, 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도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오픈뱅킹 시행을 앞두고 22일 자산관리플랫폼 ‘케이비마이머니’를 전면 개편했다. 국민은행에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등록한 다른 금융기관 데이터까지 반영해 자산 흐름을 보여주고, 포트폴리오를 진단하고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을 더했다. 우리은행은 앱 ‘위비뱅크’를 협업 핀테크 기업과 고객 간 접점을 제공하는 오픈뱅킹 채널로 구현하고, ‘편의성’과 ‘개인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토스 쪽은 오픈뱅킹이 시작되면 기존에 10회를 넘는 송금을 할 때 고객에게 받았던 건당 수수료(500원)를 무료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례2) 국외 오픈뱅킹 도입**

지난해 1월 영국 등 유럽에서 시작된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등 외부에서도 은행이 보유한 금융정보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영국 내 오픈뱅킹 에이피아이(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이용) 건수는 지난해 8월 420만건에서 올해 8월 1억1050만건으로 1년 만에 26배 성장하며 시장의 수요를 확인했다.

**신용정보법**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빅데이터 3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

1.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영향과 대책**

**서론: 개도국 유지 불가의 현실.**

개도국 유지의 현실적 어려움을 배경으로 최근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제시한 선진국 기준에 모두 해당하며 1인당 실질소득, 인간개발 지수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선진국 전환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본론에서 선진국 전환에 따른 영향을 살피고 국내외 대책을 논한다.

**본론 1 선진국 전환에 따른 영향**

1. **특별품목 제한**

- 개도국에게 관세 감축, 특별품목, 특별세이프가드 등 관세 혜택 제공. 그중 특별 품목이특별 품우리나라에 중요. 특별 품목은 개도국에만 특별 품목를 허용, 관세 감축 면제해주는 제도.

-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의 특징은 쌀, 축산물 등 일부에 집중, 개도국에 주어지는 ‘특별 품목’을 통해 소수 핵심 농산물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농업 시장에 영향.

- 선진국이 되면 고율관세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

-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선진국이 되어 특별품목에서 일반품목이 되면 현행 500% 가령의 관세에서, 150% 수준으로 낮아짐.

1. **농업보조금 감축**

- 감축대상보조는 5년 내 45% 감축에서 8년 내 30% 감축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의무 이행 시 현행 1조 5천억에서 8200억원으로 축소, 개도국 지위 시 현행 유지 가능

- 우리나라는 감축대상보조가 대부분 쌀 변동직불금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상한인 2016년에는 쌀 값 폭락으로 상한인 1조 5000억에 육박.

- 선진국 의무 이행은 현행 쌀 소득보전제도 운영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 제도 변경이 불가피.

**본론 2 대책**

1. **국내 정책적 접근**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포함한 감축대상보조정책을 개선이 해야한다.**

감축대상보조의 감축 폭 확대로 인해 향후 감축보조에 기초한 농정운용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직불금 제도로는 선진국 상한인 8200억에 맞춘 집행이 불가능하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포함한 감축대상보조정책을 개선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 중심의 농정 대전환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외교적 접근**

**개도국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 및 연착륙 장치 마련해야한다**.

다자 간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 졸업제’를 WTO 체제 내에서 제도화하고 특별품목 유지에 집중에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한다. 원칙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준수하되 쌀 등 소수 핵심 품목의 보호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겠다는 제안과 같은 선진국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결국 WTO의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비하여 국내외적인 노력이 모두 필요하며 각 부처간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소수의 품목에 집중된 대한민국의 농업 상황에 맞춰, 개도국 졸업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고, 이에 맞게 국내 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교적, 정책적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4. 애그테크** (Agricultural Technology)

**정의**

애그테크는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으로 농업 생산력을 키우는 기술을 일컫는다.

**필요성**

-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90억명을 돌파할 전망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050년까지 70% 식량 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투자현황**

애그테크 스타트업 투자 정보 제공기업 애그펀더에 따르면, 투자액은 2012년 30억달러에서 2017년 101억달러로 증가했다.

**스마트팜**

`- 비닐하우스 또는 축사에 ICT를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이 전제.

- 미국의 경우, 약 25만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

**국외 현황**

**- 생산설비 측면**

**미국 ‘플렌티(Plenty)’**

2013년 설립된 미국 ‘수직농장’ 스타트업 ‘플렌티(Plenty)’는 물은 기존 농장에 비해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을 350배까지 끌어올리는 기술혁명을 이뤄냈다.

**미국 `아이언 옥스(Iron Ox)`.**

아이언 옥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국의 첫 자동 로봇 농장이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팜과 다른 점은, 단순히 농작물 재배 과정의 일부를 기술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했다는 점이다.

**- 서비스적 측면**

**미국 ‘파머스비즈니스네트워크(Farmers Business Network·FBN)’**

2014년 설립된 FBN은 종자, 토양, 데이터 분석으로 농업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매년 500~600달러를 회비로 낸 회원들은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를 교류한다

**중국** **알리바바 ‘타오바오 서비스센터’**

알리바바는 농촌 마을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타오타오 서비스 지원 센터를 설립해 판로개척을 돕고, 청년 인력5만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타오바오 서비스센터는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촌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을 도시에서 구매대행을 해주는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내 현황1. 스마트팜 혁신밸리**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애그테크 보다는 스마트팜 구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곳을 목표로, 1차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올해 2차로 고흥과 밀양이 선정

기대 효과 1. 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공략

기대 효과 2. 안정적인 식량 공급으로 식량 주권 확보

기대 효과 3. 가격 추이의 정밀 분석을 통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

기대 효과 4. 스마트 농가 간 시스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특정 작물의 최적화된 생육 환경 제공

**국내 현황2: 한국형 애그테크 투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충남 태안군의 한국형 스마트팜.**

한국서부발전에서 나오는 발전소 온수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 이 지역은 땅 염분이 높고 농업용수가 부족해 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스마트팜은 스마트팜이 완공되면 향후 5년간 원북면 24개 마을 농가소득이 119억원 늘어날 전망.

**지역경제 활성화 ‘황악산호두영농조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특산물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사회적 기업이자 학생 기업인 ‘황악산호두영농조합’이 하나의 사례다. 황악산호두영농조합은 ‘김천호두 초콜릿’ 개발을 시작으로 호두를 다양하게 상품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역 특산품을 상품화하고 판로를 개척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활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농협의 입장: 소극적인 태도 -> 적극적으로 참여**

**긍정적 입장 (2019.04.22)**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은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양측은 ▷농산물 상생마케팅, 농협 상품권사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공동 노력 ▷농어업·농어촌 가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례 발굴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한 경제지주 계열사 홍보 및 출연확대 ▷농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적 입장(2018.10.10)**  
FTA 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등 33개 회사 중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회사는 농협케미컬 1천만원, 농협물류 2천만원이 전부였다.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기금은 이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농·수협,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하여 총 1조원을 마련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서 목표액(’17~’18 2천억원) 대비 20%에도 못미친 377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을 위한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에 인색한 농협이 최근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농협이 본분을 잊은 채 수익사업에만 열중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금융부문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8,589억원으로 최고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도 8월까지만 당기순이익이 1조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가상화폐**

**서론.**

가상화폐(假想 貨幣, virtual currency 또는 virtual money)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3%81_%EA%B3%B5%EA%B0%84)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https://ko.wikipedia.org/wiki/%EB%94%94%EC%A7%80%ED%84%B8_%ED%99%94%ED%8F%90) 또는 [전자화폐](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C%9E%90%ED%99%94%ED%8F%90)를 말한다. 가상화폐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지불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상화폐는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의 거래를 편리하게 함은 물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본론1 가상화폐의 효용**

1. 경제적 부가가치창출.

턴센트 (Tencent)의 Q머니:

온라인 게임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 인민폐의 매출을 올리며, 경제적 이윤을 창출.

2. 사회전체의 상품화 정도 상승

가상화폐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필요한 전자 자료와 각종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률이 떨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상품화 정도가 상승. 이로 인해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가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전통적 전자 상거래 및 전통 경제와 융합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시장 일체화 수준을 제고 가능.

3.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의 확대로 신경제 촉진 및 생산성 향상

가상화폐가 발행됨에 따라, 인터넷 업체들은 대량의 가상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화폐의 생산 수량을 늘리는 추세. 즉, 가상화폐 도입으로 중간 상품의 확대는 사용자 간 편리하게 거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 수준과 생산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

**본론2 가상화폐가 직면한 문제와 해결책**

- 문제: 보안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상화폐 발행자는 기술의 허점을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해커와 범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 존재. 가상화폐 보유자가 발행자의 부정행위 혹은 해커와 범죄자들로부터의 도난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음.

- 해결책: 국가의 관리 감독 체계 강화

가상화폐가 사회경제 시스템에 줄 수 있는 위험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를 통해 낮출 수 있음. 하지만 정부 통제가 강해지면 가상화폐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기술적 장치와 대안적 제도가 필요.

**결론**

가상화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적 감시 및 통제로 이러한 위험성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면, 가상화폐는 미래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전망. 기업이나 개인이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참고) 암호화폐 vs 가상화폐

암호화폐와의 차이점

[유럽중앙은행](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EC%A4%91%EC%95%99%EC%9D%80%ED%96%89)(ECB), 미국 [재무부](https://ko.wikipedia.org/wiki/%EC%9E%AC%EB%AC%B4%EB%B6%80), [유럽은행감독청](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C%A0%EB%9F%BD%EC%9D%80%ED%96%89%EA%B0%90%EB%8F%85%EC%B2%AD&action=edit&redlink=1)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https://ko.wikipedia.org/wiki/%EB%94%94%EC%A7%80%ED%84%B8_%ED%99%94%ED%8F%90)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https://ko.wikipedia.org/wiki/%EC%95%94%ED%98%B8%ED%99%94%ED%8F%90)는 [디지털 화폐](https://ko.wikipedia.org/wiki/%EB%94%94%EC%A7%80%ED%84%B8_%ED%99%94%ED%8F%90)이면서 가상화폐이다.

하지만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D%8A%B8%EC%BD%94%EC%9D%B8)은 디지털 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게 된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일부 환경에서는 (법화(法貨)인) 화폐처럼 작동하지만 진짜 화폐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교환 수단"이란 뜻으로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전자상품권 등을 제외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암호화폐](https://ko.wikipedia.org/wiki/%EC%95%94%ED%98%B8%ED%99%94%ED%8F%90)를 가리킬 때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카카오페이](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B9%B4%EC%98%A4%ED%8E%98%EC%9D%B4)나 [네이버 페이](https://ko.wikipedia.org/wiki/%EB%84%A4%EC%9D%B4%EB%B2%84_%ED%8E%98%EC%9D%B4) 등 [가상 공간](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3%81_%EA%B3%B5%EA%B0%84)에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지급 결제 수단은 모두 가상화폐에 포함한다.